주간 통일정세

2014-4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Ⅰ.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Ⅲ.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KINU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14-43(2014.11.03~11.0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Ⅰ.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조평통, 통일헌장은 "체제대결 기도" 비난(11/6,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6일 서기국 보도에서 정부가 내년에 공포할 예정인 '통일헌장'이 흡수통일을 위한 것이라며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괴뢰패당의 통일헌장 조작 책동은 체제대결, 제도통일 기도를 집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이어 통신은 조평통 보도에서 김일성 주석이 발표한 '조국통일3대헌장'과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통일대강'으로 내세우며 "괴뢰패당은 범죄적인 통일헌장 조작 놀음을 당장 걷어치우고 북남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일헌장, 통일대강들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음을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대북전단 거듭 비난…"삐라는 인권 모략"(1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대결과 전쟁을 몰아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삐라 살포 난동과 그 파국적 후과(결과)는 괴뢰당국이 강행하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의 대결적 본질을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말로는 대화와 신뢰를 떠들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추구하고 신뢰가 아니라 불신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남북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함.
- 또한 노동신문은 3일 '광대극의 추악한 내막'이라는 글에서도 남한 정부의 '인권모략'이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한 사실 등을 비난함.

■ 北 매체 "스마트폰 北 해킹 주장은 새 모략극" 비난 (11/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3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의 국내 스마트폰 해킹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데 대해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깨트린 데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가 높아가는 것과 때를 같이 한다"며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날려버린 죄행을 정당화하고 북에 대한 적대감정을 고취하려고 '해킹'설을 조작했다는 내외여론의 주장은 우연하지 않다"고 주장함.
- 이어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그로부터의 출로를 새로운 '북풍' 조작으로 벗어나 보려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이 역대로 써먹는 상투적 수법"이라며 "그 앞장에 이른바 모략의 소굴인 괴뢰정보원(국정원)이 서 있다"고 비난함.

■ 北, 연일 전단 살포 비난하며 대남 압박 (11/4, 민주조선; 11/5,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 민주조선은 4일 자에 실린 '사태의 엄중성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세계제패 야망 실현에 적극 편승하는 남조선 당국으로서는 흡수통일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질 뿐 우리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애당초 바라지 않고 있다"고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논평에서 지난달 31일 경기도 포천에서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삐라 살포 행위를 묵인, 조장시킴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차던졌다"고 비난함.
- 통신은 또 5일 인민보안부 간부의 주장을 소개하는 형식의 글에서 "만일 그들(남한 정부)이 지금과 같은 반통일 대결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대화는 고사하고 기구조준타격은 물론 그 본거지와 배후 지휘세력에 대한 타격까지 선포한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복수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평양방송 또한 5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조선 당국은 한 줌도 못 되는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의 망동 때문에 엄청난 화를 입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대북전단 살포)를 저지시키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 北 통신, 南 호국훈련 비난…"북침연습"(1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논평에서 우리 군이 10~21일 최대 규모로 실시할 예정인 호국훈련에 대해 "이번 호국훈련은 그 규모와 내용 등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 더욱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것으로 하여 호전광들의 전쟁 광기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비난함.
- 통신은 "호전광들은 그 무슨 '북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을 운운하면서 합동상륙훈련, 서북도서 방어훈련, 요격훈련 등 도발적인 훈련들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며 "미제 침략군도 투입된다고 한다"고 지적했으며, "호전광들은 해마다 '호국'의 간판 밑에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전쟁 연습을 벌여놓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기회만을 노려왔다"고 덧붙임.

■ 北 신문, 연일 삐라 살포 비난…"남북 대화 없다"(11/8,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8일 '대화를 우롱하는 범죄적 망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가 이미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삐라 살포를 중단하지 않는 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은 언제 가도 있을 수 없다"고 밝힘.
- 민주조선도 8일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문제는 괴뢰당국에 삐라 살포를 막을 의도가 꼬물만치도(조금도) 없다는 데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삐라 살포 망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와 마주앉아 대화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신형 전술미사일, SS-21 개량형 추정"(11/3, 38노스)

-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소장은 3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새 미사일도 SS-21의 사거리를 더 늘린 개량형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기함.

- 이와 함께 노동신문 등에 실린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1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곳과 6월 26일 발사한 곳이 같았다며, 원산 인근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 단지처럼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北 유소년축구단 참가 2014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개막(1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7일 보도를 통해 한국·북한·우즈베키스탄·중국 등 4개 국가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한 '2014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가 개막했으며, 북한 유소년 축구단 선수 중 8명도 개막식에 참석 하고, 개막식이 끝난 후 북한 4·25 체육단 유소년팀과 경기도 유소년 팀의 경기가 이어졌음을 전함.

- 韓美의 「전작권」 재연기 합의 관련 '이번 합의는 미국의 강도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北)와 군사적 대결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난(11.4,중앙통신·민주조선)
- '南 당국이 삐라살포의 배후 조종자이며 진범인'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삐라살포를 계속 묵인·조장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11.6,노동신문)
- '오늘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다'며 '괴뢰패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참혹한 폐허지대,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 및 '집권세력의 독재정치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는 극악한 파쇼폭압통치'라고 비난(11.7,중앙통신·노동신문)
- '통일헌장' 제정 계획 관련 '남북 사이의 체제대결, 제도통일' 기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연일 비난(11.9,중앙통신·민주조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외무성 "'인권공세' 美와 인권·핵 대화 안해"(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진정한 인권대화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우리를 전복하려는 적에게는 인권대화는 물론 핵대화도 허용할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미국은 먼 앞날도 아니고 바로 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벌써 우리 병진노선의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통신은 다른 논평을 통해 10월 21일 북미 제네바합의 20주년을 맞은 사실을 언급하고 "대조선 적대시정책이야말로 미국 전체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우둔한 자살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우리의 핵능력 강화가 미국의 전략적 안보에 위협으로 느껴진다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인권문제 거듭 반박…"美 '인권소동' 안 통해" (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통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인권 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미제를 매장하기 위한 판가리 결전에서 우리의 핵무력과 그것을 포함한 정치·군사적 억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것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힘.
- 논평은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북한 체제를 압박해왔다며 '인권소동'도 이같은 '대북 적대시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인권은 특정한 나라나 세력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미국의 인권기준이 세계 보편적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덧붙임.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북한, 억류 미국인 2명 모두 석방…귀국길에(11/8, 연합뉴스)

- 북한이 억류해온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매튜 토드 밀러(24)씨를 전격 석방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 보도함.
- 두 미국인은 8일 오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에 파견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과 함께 평양을 떠나 미국령 괌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며, 오후 미국을 향해 출발해 8일 밤늦게 워싱턴 주 매코드 공군기지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마. 대중국

■ 주미 중국대사 "북한 ICC회부 반대…내정 간섭말라"(11/4, 포린폴리시; 1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6일 기사를 통해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4일 진행된 미국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북한의 내정(domestic affairs)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난했음을 전함.

■ 북한산 무연탄, 중국 항만서 중량 미달 또 적발 (11/8, 제노만보)

- 중국 산둥(山東)성 룽커우(龍口)항 출입국검사검역국은 최근 북한에서 수입한 무연탄에 대한 검사에서 16차례 연속으로 애초 계약한 양보다 실제로 배에 실려온 양이 적은 것을 적발했다고 현지 매체인 제노만보(齊魯晩報)가 8일 보도함.

바. 대일본

■ 북한 에볼라 차단 조치로 북일 스포츠 교류 연기(11/4, 도쿄신문)

- 도쿄 신문은 4일 일본체육대가 북한에서 가지려던 스포츠 교류 시합이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국인 입국자 격리 조치로 급거 연기됐다고 보도함.

■ 조선총련 건물·토지, 일본 부동산기업에 매각 확정(11/5,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5일 보도를 통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소법정이 경매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마루나카 홀딩스에 조선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를 매각도록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조선총련이 낸 특별항고를 기각했다고 전함.

■ 북한, 일본인 납치범 조사방침(11/5,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5일 북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0월 28일~29일 평양에서 열린 북일 협의에서 북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일본인 납치 가담자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했음을 보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주영 북한대사관 미술전…첫 공관 개방 눈길(11/3, 텔레그래프)

-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3일 보도를 통해 주영 북한대사관이 11월 4일~7일 동안 런던 북부 일링의 주택가에 있는 공간을 개방하고 북한작가 미술전을 개최한다고 전함.
- 매체는 해당 전시회 기획에 참여한 영국 미술전문가 데이비드 히서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최고위층의 결단으로 전시회가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으며, 공관 1층 라운지에 임시로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만수대 예술단 소속화가들의 작품 수십 점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함.

■ 北 김영남 아프리카 순방 마무리…'고립탈피' 초점 (11/4, 조선중앙통신; NK뉴스;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보도를 통해 10월 21일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을 거쳐 수단, 콩고, 우간다를 방문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강하국 보건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서길복 대외경제성 부상과 함께 3일 비행기 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힘.
- 북한 공식 매체는 이번 순방의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NK뉴스는 지난 1일 김 상임위원장과 동행한 궁석웅 부상이 오켈로 오리엠 우간다 외교부 차관에게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으며, 연합뉴스는 이와 같은 북한의 동향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저지하고자 국제무대에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분석함.

■ 아일랜드 NGO, 20억 규모 새 대북지원 추진(11/5,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방송은 5일 방송을 통해 1997년부터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과 산림 황폐화 방지, 식수·위생 개선 활동을 펼쳐왔던 아일랜드 NGO '컨선 월드아이드'가 150만 유로(약 20억3천만원) 규모의 새로운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컨선 월드와이드'의 이파 블랙 북한 담당관은 유럽연합(EU)에 신청한 150만 유로의 예산지원이 승인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북한 강원도 지역에서 영양 개선 및 식량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대북 지원사업은 주로

강원도 통천군과 법동군에 집중될 것이라며 "두 지역 주민들에게 보전농법을 전수하고 협동농장에 관개시설을 설치해줄 것"이라고 전함.

- 이어 블랙 북한 담당관은 통천과 법동 지역의 식품가공공장 재건을 돕고 공공시설과 일반 가정에 화장실도 지어줄 계획이며, 이번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힘.

■ 北 농아인들 핀란드 방문…장관 면담(11/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8일 핀란드 국제개발부 유하 펠토넨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북한 농아인 3명과 조선장애인보호연맹 관계자 3명 등 북한 대표단 6명이 7일(현지시간) 세르파 파테로 국제개발부 장관과 30분간 면담이 진행되었다고 전함.
- 이어 방송은 대변인이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핀란드는 북한에 순수한 인도적 지원만 하고 있을 뿐 (장애인 지원을 비롯한) 개발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음을 전함.

- '김정은 黨총비서 추대 17돌'과 '黨창건 69돌 및 ㅌㄷ결성 88돌' 즈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왔다고 소개(11.3,중앙통신)
- 양형섭, 11월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 방문한 駐北 체코대사와 담화(11.3,중앙통신)
-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발언(북핵 포기는 실현 불가능, 대화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을 거론하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자국 내에서까지 실패한 정책으로 비난받고 있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 주장(11.4,중앙통신)
- 강용덕 라트비아 주재 北 대사, 10월 28일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11.4,중앙방송)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11월 6일 주북 폴란드 대사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11.6,중앙통신)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11월 3일 김정일 사망(12.17) 3주기를 즈음하여 '추모행사준비위원회' 결성(11.6,중앙통신)
- 최혁철 알제리 주재 北 대사, 11월 5일 주재국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11.8,중앙방송)
- 김준갑 駐말리 北대사, 10월 28일 '말리를 위한 연합 위원장(불까쑴 아다라)' 의례 방문(11.9,중앙통신)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4월 포사격 시찰후 인민군 간부 167명 강등(4/26, 조선인민군; 11/4, 마이니치신문)

- 마이니치신문은 북한 인민군 기관지인 『조선인민군』의 4월 26일자 기사를 인용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올해 4월 인민군부대의 사격 숙련도를 지적한 이후 인민군 간부들이 대규모로 강등되었다고 11월 4일 보도함.
- 보다 구체적으로 신문은 『조선인민군』 4월 26일자 보도를 통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올해 4월 인민군 제681 군부대 산하 포병부대의 포 사격 훈련을 시찰하고 질책했으며 4월 25일 자로 관련 부대가 해산되고 간부 167명이 강등되었다는 내용을 전함.

■ 北 김정은, 지팡이 없이 軍회의 참석…전투력 강화 지시(11/5, 조선중앙TV;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보도를 통해 지난 3일과 4일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참석하여 직접 연설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으며, 참가자를 비롯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영식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음을 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연설을 통해 "인민군대에 있어서 싸움준비, 훈련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며 "싸움준비에서 내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대대들에서는 부업을 강하게 내밀어 중대들을 다 부자중대로 만들고 군인들에게 언제나 푸짐한 식탁과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강조했음을 전함.

■ 北 TV, 김정은 영상 공개…여전히 다리 절어(11/6,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6일 김정은 黨 제1비서 참석 하에 지난 3~4일 평양에서 열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영상을 방영함.
- 연합뉴스는 조선중앙TV의 영상을 기반으로 지난달 14일 장기간의 칩거를 깨고

등장한 이후 북한 매체가 김 제1위원장의 걷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영상 속 김정은 黨 제1비서는 의장에 입장하거나 연단으로 이동할 때 지팡이 없이 걸었으나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제약공장 시찰…의약품 대량생산 지시(1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의약품 생산공장인 정성제약종합공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방문한 의약품 생산공장이 2011년 2월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찾았던 곳이며, 최룡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허환철 당 부부장 등이 수행했음을 전함.
- 이어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공장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살펴보고 의약품검정소, 수액공장 등을 둘러보고 공장에서 간편하면서 쓰기에도 편리한 여러 가지 휴대용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제약공업 발전에서 이 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군인과 인민들에게 보내주며 의약품의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음을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박봉주,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개건 공사현장 현지 요해(1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보도를 토해 박봉주 내각 총리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개건 공사현장을 현지 요해했으며, 그에 앞서 중앙동물원 개건·보수 공사장과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를 돌아보았음을 전함.

■ 최룡해, 장성택 측근 숙청자 명단에 올리라고 지시(11/5, 요미우리신문)

- 요미우리신문은 5일 북한 관계 소식통 인용한 보도를 통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작년에 처형당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가까운 간부를 숙청 대상자 목록에 올리도록 군에 명령한 것을 파악됐다고 전함.

■ 박봉주, 황해남도 웅진·강령·신천·은률군의 낟알털기 정형을 현지 요해(1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보도를 통해 박봉주 내각 총리가 황해남도 웅진·강령·신천·은률군의 낟알털기 정형과 평안남도 숙천군 열두삼천농장의 낟알털기 정형을 현지 요해했으며, 올해 가뭄으로 내년 농사에 필요한 관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건에서 물 확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강조했음을 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김정은조선'…北, 김정은 붙인 신조어 속속 등장(1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보도에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3~4일 열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보고에서 "이 땅 위에 김정은백두산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강조했음을 전함.

■ 北 전군 대대장, 김정은에 충성 다짐(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대대장과 대대 정치지도원들이 7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 모여 김정은 黨 제1비서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 제3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하신 연설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며 행사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 북한군 지휘부가 참석했다고 전함.
- 이어 황 총정치국장이 연설에서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워 모든 대대를 김정은

빨치산 대오, 당의 제일 근위대오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을 대표해 대대장과 대대 정치지도원들도 연설했음을 전함.

- 「선군정치」는 "지배주의 세력에게 강타를 안기는 위력한 정치방식, 자주정치를 대표하는 위대한 정치방식"이라고 '김정일의 선군정치 정당성·생활력 및 김정은 계승 발전' 강조(11.5,중앙통신·노동신문)
- '당의 결정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기적을 창조해 나가는 인민군대가 있어 조선이 세기를 주름잡으며 비약할 수 있었다'며 '당의 존엄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 보장하는 인민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과 인민의 자랑이고 긍지'라고 주장(11.9,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 8일 前 소련 국방장관(드미트리 야조브)의 생일(90세) 즈음 현영철(인민무력부장)을 통해 '친서와 선물 및 꽃바구니' 전달(11.9,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신문, 철도 현대화 독려…"수송문제 해결 방도"(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평양철도대학 교수인 조명남 박사가 기고한 글에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철도를 현대화하는 것은 기관차와 화차를 비롯한 수송수단의 질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우고 인민경제의 수송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철도 현대화를 독려함.
- 조 박사는 최근 철도 분야의 과학자·기술자들이 비동기 견인전동기를 설치한 교류기관차 '선군붉은기' 1호를 개발했다며 "레일 맞댐용접기 제작, 철도수송 조직과 지휘, 경영활동의 정보화 실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도 전진이 이룩돼 철도의 중량화와 고속화, 철도 운수정보관리체계 확립에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함.

나. 주요 후속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세계 하위 11~16% 수준(1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6일 보도에서 한국은행이 발간한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에 실린 '북한 국민소득 통계 소개 및 소득수준 비교' 논문을 인용하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에는 세계적으로 하위 30%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1~16%선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음을 전함.

■ 北, 연말 앞두고 연일 '연간생산계획 초과' 선전(11/6~7, 9, 노동신문)

- 6일자 노동신문은 1면에서 자강도에 있는 차가평시멘트공장이 지난달 말 작년 한 해 생산량의 1.3배를 달성했다고 밝힘.
- 신문은 7일에도 1면에서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수산협동조합이 지난달 중순에 연간 생산계획의 1.5배를 달성했으며 신의주를 비롯한 각지의 고치(누에고치) 생산사업소에서도 연간 생산계획을 뛰어넘었다고 소개함.
- 이어 신문은 9일 '연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계속 혁신'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내각 화학공업성 소금공업관리국의 올해 소금생산계획이 큰 폭으로 초과 달성됐다고 밝힘.
- 신문은 특히 올해 소금 생산량이 작년보다 28만여 t 늘었다며 제염 부문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높이 평가함.
- 신문은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도 지난달 13일 부로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으며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올해 비료 생산량이 기존 최대 생산량 기록의 1.2배에 달했다고 선전함.

라. 대외 경제관계

■ 北, 中 항공유 수입 회복세…올해 1만3천t(1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4일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1월부터 9월까지 1만 3천 톤의 항공유를 수입해 작년 같은 기간 359톤 보다 증가했음을 전함.

- 이어 뉴스는 북한이 중국에서 사들인 항공유 규모는 2011년 동기에는 3만 8천 톤, 2012년 동기에는 3만 9천 톤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에서 사는 항공유 규모는 여전히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덧붙임.

■ 北, 상하이~평양 직항 타고 마라톤 참가 상품 허가(1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중국 상하이~평양 직항 노선을 이용해 내년 4월 11일~13일 평양에서 열리는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관광상품을 미국 뉴저지의 북한 전문여행사 '우리투어스'에 허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방송은 여행사에서 마라톤대회에 미국인을 포함해 어떠한 국적의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으며 특히 대회에 참가하는 관광객 또는 선수에게는 북한 감시인이 따라다니지 않는다고 강조했음을 전함.
- 이어 해당 관광 상품을 구매한 관광객들은 마라톤대회 전날 김일성경기장을 둘러볼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며, 평양과 개성, 비무장지대 등의 관광을 포함한 6박7일 일정으로 가격은 2천400달러(약 260만9천원)라고 전함.

- 원산 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113.8%)·원산유리병공장(121.1%)·원산영예군인수지가공공장(110.6%), 연간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 이룩(11.3,중앙방송)
- 화학공업성 소금공업관리국, 소금생산 실적(작년 대비 2.3배) 선전(11.4,중앙통신)
- 국가과학원에 "자연 에너지자원 개발, 이용에 대한 연구사업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연에너지연구소'가 새로 꾸려졌다"고 보도(11.4,중앙통신)
- 건설건재공업성 일꾼들, 10월 인민경제계획 113% 초과 수행(11.6,중앙방송)
- 北, 'CNC부하전력관리체계'(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개발)가 자강도를 비롯한 여러 도, 시, 군들에 도입되어 은을 내고 있다고 선전(11.7,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체육은 포성 없는 전쟁…우승은 민족의 힘"(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을 7일 '조선의 체육열풍'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서 체육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강조함.
- 정론은 "조선의 체육열풍, 이 말이 안고 있는 의미는 간단치 않다"며 "체육은 나라의 진보와 민족의 운명발전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강력한 변수"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체육은 총포성이 없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체육은 국력의 대결이며 체육경기에서의 우승은 민족의 힘과 정신력의 주장"이라고 덧붙임.
- 나아가 정론은 "조선의 체육열풍은 김정은 동지께서 일으키는 오늘의 새 시대의 기상"이라며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30년, 300년에 맞먹는 두터운 페이지를 아로새긴 원수님의 체육강국 건설 영도사"라고 선전하며 체육열풍을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공으로 칭송함.
- 이어 김 제1위원장과 체육인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금메달로 떨치고 빛내는 체육 전장의 미더운 전우"라고 표현하며 김 제1위원장이 체육인을 '애국자', '멋쟁이' 등으로 부른다고 소개하였으며, "체육은 유흥이나 오락이 결코 아니다. 체육에 대한 사랑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고 집단에 대한 사랑이며 생활에 대한 애착이다"라며 모두가 체육열풍에 뛰어들 것을 호소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北 대남매체, 연일 신상털기식 탈북자 비난 공세(11/4, 우리민족끼리; 11/6, 연합뉴스)

-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이용해 지난 4일부터 매일 '탈북자, 너는 누구냐'라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북 인터넷매체 뉴포커스의 장진성 대표를 잇달아 비난하는 등 탈북자들에 대한 신상털기식 비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이어 뉴스는 지난해부터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탈북자들을 비난했지만, 탈북자들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방식과 함께 최근에는 탈북자들의 출신학교를 비롯한 기본적인 경력을 그대로 공개하거나 가족을 동원하는 방법을 쓰고 있음을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北 관리 "에볼라 차단 위해 모든 수입품 검역"(11/3, 조선중앙방송)

- 리철진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1월 3일 조선중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경지역의 검역강화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반입 통로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함.
- 구체적으로는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운수수단들과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철저히 검역사업을 진행"하고, "특히 단 하나의 수입품도 놓치지 않고 철저한 소독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경지역과 공항 등에서 입국자들을 빠짐없이 격리중이라고 덧붙임.

■ 北 휴대전화, 한 달에 천원 내면 200분 기본 통화(11/4,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4일 북-중 접경지역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 휴대전화의 기본요금은 북한 돈 1천원(10월 15일 환율을 기준으로 북한 돈 1천원은 약 12센트)이며, 기본요금으로 한 달에 200분의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보도함.
- 이어 방송은 북한에서 평양과 북한 체신성과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합작으로 운영하는 '고려링크' 대리점이 평양과 각 도 체신국에 설치됐으며, 이곳에서 휴대전화 판매와 요금 수납 등이 이루어진다고 전함.

■ 北 올해 남자축구 최강팀은 청년동맹 소속 '횃불팀'(11/3, 조선중앙통신; 11/4,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3일 공화국선수권대회(우리의 전국체전에 해당) 축구 1급 경기가 끝났다며 "40여 일간 치열하게 벌어진 강팀들 사이의 대결전에서 횃불 남자팀이 우승했다"고 전함.
- 연합뉴스는 4일 조선신보의 1월 보도를 인용하여, 횃불 축구팀은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작년 5월에 갓 조직되었으며, 특히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체육 열풍을 일으키는 데서도 청년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며 횃불팀 설립을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함.

■ 北, 에볼라 예방 위해 호텔 등에 외국인 격리(11/6, 조선신보)

- 북한의 국가비상방역위원회 중앙지휘부 상무책임자인 박명수 국가위생검열원장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들은 평안남도 안주시 청천강여관과 평안북도 신의주시 압록강 여관에 격리돼 보건 담당자의 의학적 감시를 받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6일 보도함.
- 이어 국가비상방역위원회는 보건성·농업성·노동성·철도성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각 도·시에 비상방역지휘부를 꾸리고 전국적인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사업을 지휘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에볼라 예방 조치에 따라 북한 주재 외교·국제기구 대표부 직원들은 해당 대표부에, 재일동포는 평양호텔 등 지정장소에 격리된다고 전함.

■ 北 대학입시에 외국어 회화 도입…"실천형 인재 양성"(10/30, 교육신문; 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북한 주간지 교육신문(10월 30일자)은 '외국어 청취 및 회화 시험이 진행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내각)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학 입학시험과 상급학교 추천을 위한 예비시험에서 외국어 청취 및 회화시험을 조직한다"고 밝힘.
- 김일성종합대학 등 주요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평양 지역 수험생은 내년부터 예비시험, 대학별 시험 등 총 2회에 걸쳐 영어 듣기·회화 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뉴스는 전함.
- 교육신문은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과학발전과 세계 선진과학기술 습득, 국제적 교류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크다"며 "특히 시대가 요구하는 실천형 인재 양성에서 외국어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는 아주 중요하고 무겁다"고 강조함.

■ 北 엄윤철, 세계역도선수권서 2개 금메달(1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역도의 간판 엄윤철(23)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땄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통신은 엄윤철이 8일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남자 역도 56kg급 경기에서 용상 168kg에 합계 296kg을 들어 올려 용상과 합계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함.

- 황해남도, 역사유적들을 원상대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보수공사 진행(11.3,중앙통신)
- '우표와 우표관련 유물수집발굴사업' 진행(사용하지 않는 우표·엽서 및 인쇄설비들과 도구, 우표관련 유물자료 등) 예고 및 '해당기관·개별적 소장 자료들'을 팩스·이메일 통해 수집(11.5,중앙통신)
- 평양 육아원·애육원의 원아들, 11월 6일 새로 지어진 새집으로 이사(11.6,중앙통신)
- 전국 생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11월 5일과 6일 평양에서 진행(11.6,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1차 무한국제교예축전(11.1~6, 중국 무한시)에 참가한 北 교예팀, 최고상인 '황학금상' 획득(11.9,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미국, 성 김 전 대사 6자회담 수석대표로 지명 (11/07, 연합뉴스)

- AP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 김 전 대사를 글린 데이비스 현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후임으로 지명했으며 데이비스 현 대표는 조만간 이임한 뒤 연말 또는 연초 해외 공관장으로 나갈 것으로 알려졌음.
- 성 김 전 대사는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겸직할 예정임.
- 김 전 대사는 지난 2011년 한국에 부임하기 전 6자회담 특사를 맡아 북핵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앞으로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 출신의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와 호흡을 맞춰 북핵 문제를 비롯한 6자 회담 재개 업무를 담당하게 됨.

나. 미·북 관계

■ 北 외무성 "'인권공세' 美와 인권·핵 대화 안해" (11/04,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진정한 인권대화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우리를 전복하려는 적에게는 인권대화는 물론 핵 대화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음.
-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앞두고 핵 문제 등을 내세워 미국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보여짐.
-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과거 정권과 달리 인권 문제로 북한을 전복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구한다며 "조선반도 비핵화의 근본기초로 되었던 조미가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에 대한 2005년 9·19공동성명의 공약을 깨버리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없다고 밝혔음.

■ 북한, 억류 미국인 2명 모두 석방…귀국길에 (11/09, 연합뉴스)

- 북한이 억류해온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매튜 토드 밀러(24)씨를 전격 석방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8일(현지시간) 밝혔으며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라는 죄목을 받고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배씨는 2년만에,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밀러씨는 7개월만에 풀려나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의 안전한 귀환에 매우 감사한다"며 "오늘은 그들(케네스 배, 매튜 밀러)과 가족에게 매우 좋은 날이며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번 특사 파견은 북핵협상과는 관련이 없다"며 "북한이 기존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음.
- 워싱턴 외교가는 북한의 이번 석방조치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을 계속 억류하고 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오는 11~12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정책을 유지하는 양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음.

다. 중·북 관계

■ "北, 中 항공유 수입 회복세…올해 1만3천t" (11/04,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중국 해관(세관) 통계를 인용, "항공유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1만3천t을 수입해 작년 같은 기간 359t보다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으며 이는 지난해 급격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감소한 북한과 중국 사이의 항공유 거래가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항공유(제트유) 공급을 축소했고 북중간의 무역을 규제했다"고 언급했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이 언급한 항공유의 경우는 통계 외 상황을 언급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중국 해관 통계상으로는 1~9월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0'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지만 해관 통계에 잡히는 무역거래 외에도 상당량의 유류를 유·무상 원조 형태로 북한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주미 중국대사 "북한 ICC회부 반대…내정 간섭말라" (11/06, 연합뉴스)

-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북한의 내정(domestic affairs)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해외에 주재하는 공관장이 직접 나서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례적임.
- 추이 대사는 "미국이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 인민들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ICC이건 다른 곳이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도움이 되거나 건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그는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해 "첫째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둘째 평화와 안정, 셋째 협상과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음.

라. 일·북 관계

■ "북한, 일본인 납치범 조사방침" (11/05, 연합뉴스)

- 교토통신에 의하면 북한은 공작원으로서 납치 사건을 실행한 신광수(1929년생)와 김세호(1929년생), 일본 민항기 요도호 납치 사건을 일으킨 우오모토 기미히로(1948년생)와 요도호 납치범의 부인 2명 등의 진술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짐.
- 북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8~29일 평양에서 열린 북일 협의에서 일본 정부 당국자에게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북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음.
- 일본 당국은 그간 이들을 일본에 넘기라고 요구했으나 북한이 이번 협의 때 이를 수용할 뜻을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북한이 납치 문제 조사를 어디까지 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 밝힌 내용이 시간을 벌기 위한 핑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평가됨.

■ 일본 관방장관 "메구미 사망정보 신빙성 없어" (11/07,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일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가 약물 투여로 사망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납치피해자들의 생존을 전제로 여러 정보를 수집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회견에서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 등이 메구미 사망에 관한 공동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음.
- 이번 메구미 사망 정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지금까지도 생존 정보라든지 여러 정보가 나돌았다. 정부는 현재 납치 피해자 전원의 생존을 전제로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기업대표단, 철도 사업차 이르면 이달 방북" (11/07, 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미국의소리(VOA)방송과 대북 철도 사업에 관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러시아 기업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가 7일 전함.
- 러시아는 앞으로 20년 동안 북한 내 3천500㎞의 철로와 터널, 교량을 개보수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러시아 기업대표단이 방북하면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러시아 기업들은 사업 자금 250억 달러(약 27조 원)를 북한 내 광산을 개발, 광물을 판매한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임.
- 갈루슈카 장관은 "현재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광산에 대한 옛 소련 과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추가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또한 러시아가 북한과 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해 '특별관리회사'를 설립 중이라며 "이 합작회사를 통해 러시아 기업들과 북한 정부 간 소통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음.

바. 기타

■ 유엔 北인권보고관, 美 북한인권특사, 내주 잇단 방한 (11/04, 연합뉴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14일,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1~13일에 각각 한국을 찾을 예정이고 이들은 방한 기간 외교부와 통일부 등 우리 정부 인사와 면담하고 북한 인권 관련 인사 및 단체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방한은 정례적인 방문 형식이지만 시점상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처리와 맞물려 있어 주목됨.
-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 방한시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동향에 대해 우리 측에 설명하고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이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양측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또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방한을 계기로 한미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협력 문제 협의도 이어가며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석방 이후 북한에 억류된 2명의 다른 미국인 석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유엔, '북한 인권 ICC 회부' 논의 본궤도 진입 (11/07, 연합뉴스)

- 유엔총회 3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EU를 대표한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가토 일등참사관은 "유엔 총회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북한의 인권 침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가토 일등참사관은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 받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날 EU 대표의 제안 설명이 끝남에 따라 3위원회는 이달 중에 결의안을 채택해 총회에 상정할 계획임.
- 북한 측은 결의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다루스만 보고관과 람브리니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결의안 채택이 강행된다면 예상 못 한 결과가 나올 것이며, 유럽연합과 일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KF-16 개량사업 잠정중단 통보…정부 "계약취소 아냐" (11/06, 연합뉴스)

-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BAE시스템스가 성능개량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현재 현황 때문에 더는 진척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미 정부와 우리 정부가 협의해서 BAE시스템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음.
- 주방사청이 2012년 7월 이 사업을 담당할 계약업체로 영국 BAE시스템스를 선정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했으며 우리 정부가 업체를 선정한 이후 미 정부와 우리 정부가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음.
- 김 대변인은 "지금도 (비용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계약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계약취소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협상 과정에서 (BAE시스템스에) 전달됐다"고 말했음.

■ 주한미군 기갑전투여단, 본토서 9개월마다 순환배치 (11/07, 연합뉴스)

-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경기도 동두천에 주둔한 주한미군 2사단 예하 제1기갑전투여단(기계화보병)이 내년에 해체되는 대신 미국 본토에 주둔중인 1개 기갑여단이 9개월마다 순환 배치되는 형식으로 이 전투여단을 대체하게 된다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미 8군 사령부가 7일 밝혔음.
- 주한미군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는 미 육군의 여단급 부대 순환배치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군 측은 순환배치를 통해 다양한 부대가 한국 상황을 숙지하게 돼 한미동맹의 한반도 방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하지만 일각에선 부대 병력이 9개월 단위로 순환하면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합한 군사전술을 충분히 습득할 시간이 없어 전력 공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정부, 미국서 PAC-3 도입한다…KAMD 구축 본격화 (11/07, 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패트리엇(PAC)-3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 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36기의 PAC-3 미사일 등과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음.

- PAC-3 체계는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40㎞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하층 방어 체계인 KAMD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알려졌으며 DSCA는 예상 가격이 14억500만 달러(1조5천258억 원)로, 주요 계약사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워싱턴DC 군사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구매 의향을 전달했고 미국 정부가 이를 검토해 의회에 통보한 것"이라며 "의회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승인하면 미국 정부는 제안 및 수락서(LOA)를 작성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고 우리 정부가 서명하면 계약이 성사돼 가격 협상에 나서게 된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음.

나. 한·중 관계

■ 한중 FTA 제14차 협상 개시…'돌파구' 열릴지 주목 (11/06,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6일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타결하기 위한 제14차 협상에 착수했으며 이번 협상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데다 처음으로 양국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는 점에서 '빅딜' 가능성이 주목됨.
- 한국 측에서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섰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중국에서는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수석 대표로 나섰음.
- 현재 양국은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章) 중에서 16개 장에 대해 타결이나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로 양국 대표단은 이날 협상에서 의견 차이가 가장 큰 상품분야의 일괄 타결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 한중 외교장관, 내주 예정 정상회담 의제 조율 (11/07,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 당국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을 가졌으며 내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북한 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음.
- 두 장관은 한중 관계와 관련, 고위급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내실화하는 한편 주요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양국 관계의 양호한 발전 추세를 가속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 및 독려해 나가자고 하는 한편 서해상 불법 조업문제, 탈북자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키로 했음.
- 또한 두 장관은 지난 9월 개최된 한중일 차관보급 회의를 통해 마련된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협의해 나아가기로 했으며 한중일 3국은 차관보급 회의에서 연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가능성을 모색키로 한 바 있음.

다. 한·일 관계

■ 일본 정부, 한국 독도시설 중단을 외교 성과로 평가 (11/05,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독도에 지으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지자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그에 입각한 외교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음.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번 건을 포함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내 한국 측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급에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번에 계획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 아닐까"라고 말했음.
- 스가 장관은 이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 측이 판단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정부, 日 '독도시설 취소' 성과 자평에 "착각은 자유" (11/06, 연합뉴스)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일본이 자국의 외교노력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 "착각은 자유"라면서 "(착각에는) 한계도 없다"고 말했음.
-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건을 포함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내 한국 측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급에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번에 계획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 아닐까"라고 말했으며 노 대변인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면서 "일본 관방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음.
- 노 대변인은 또 독도입도지원시설 건립 계획 취소 결정 과정에서 외교적 고려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독도는 우리 고유영토다. 우리의 영토주권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라면서 "제3국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라든지 제3국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밝혔음.

라. 한·러 관계

■ "한국, 러시아 공기부양정 '무레나' 곧 추가 구매" (11/06, 연합뉴스)

-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6일(현지시간) 국제 방위산업전시회 '인도 디펜스(INDO defense) 2014'에 참가한 러시아 측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공기부양정 '무레나-E' 수 대를 추가 구매할 의사를 타진했다고 전함.
- 이 관계자는 "한국이 이미 2004년에 3척을 주문해 현재 굉장히 만족하고 있으며 당시보다 다소 개량해 몇 대를 더 사려 한다"고 말했고, 개량할 부분이 이미 모두 반영됐다며 "계약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임.
-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차관 상환사업인 '불곰사업(2차·2003~2006)'을 통해 2005년부터 무레나-E를 3대 도입했고,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3대도 조만간 한국 측이 원하는 장소에서 러시아가 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마. 미·중 관계

■ 케리, 중국에 '홍콩시위 군사적 개입 말라' 촉구 (11/03, 연합뉴스)

-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회담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홍콩 내 주요도로 점거 시위대와의 충돌을 피하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케리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양 위원은 "홍콩 학생이 주도하는 시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시위대를 진입하기 위해 군을 동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 양 위원은 또 "홍콩 시위는 중국 내부 문제로 어떤 외국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중국이 홍콩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에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음.

바. 미·일 관계

■ 일본, 중간선거후 오바마 '아시아 중시' 향배 촉각 (11/05,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미국 여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의회권력을 공화당에 내준 4일(현지시간) 중간선거 결과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이지만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선거결과가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미일 안보체제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음.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일미관계는 외교의 기축"이라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음.
- 그러나 아베 내각은 강화된 미일동맹에 이번 선거결과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국회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교도는 전했음.

사. 미·러 관계

■ 러시아, 2016년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불참 의사 표명 (11/06,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오는 2016년 미국 워싱턴과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음.
- 외무부는 논평에서 "미국이 제안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구상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이 구상은 이전 회의 개최국들인 미국과 한국, 네덜란드 등에 특별한 권리를 주고 다른 참가국들은 공개적으로 차별하면서 결의문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외무부는 "미국이 제안한 정상회의 준비 시스템은 주최 측이 제시하는 모든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의 의견이 회의의 주요 결과물이 될 국제기구들의 활동 계획 입안 과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행사들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음.

아. 중·일 관계

■ 일본 항공자위대 창설 60주년 행사에 중국 공군 불참 (11/04, 연합뉴스)

- 일본 항공자위대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3~27일 도쿄에서 열렸던 '공군참모장 등 초빙행사' (ACDJ·Air Chief's Dialogue in Japan) 에 미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이 참가했으나 중국은 불참했다고 항공자위대 관계자가 밝혔음.
- 관계자는 항공자위대가 중국 공군 측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중국이 회신하지 않은 상태로 불참했다고 설명했으며 중국이 불참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 달리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음.
- 중국 공군은 2004년 열린 항공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는 참석했지만 이번에 불참한 것은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국유화 조치와 작년 11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으로 이어진 중일 갈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 日언론 "中과 정상회동"…中정부 "日 성의 보여야" (11/06, 연합뉴스)

- 오는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본 언론들은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이 양국 간 정상회동 논의를 위해 이날 베이징으로 떠났다면서 그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과 '막판 조율'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음.
- 이와 관련,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일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우리는 일본 측이 성의를 보임으로써 양국 관계에 존재하는 정치적 장애물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 반성 등을 통해 성의 있는 태도로 양국 관계의 정치적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임.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회견에서 중일 정상 대화에 대해 "형식은 어찌됐든 정상끼리 흉금을 터놓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정식 정상회담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음.

자. 중·러 관계

■ "푸틴, 시진핑과 양자회담서 17건 협력문서 서명 예정" (11/09,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사흘 동안의 방중 기간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인 시 주석과의 회담은 베이징 도착 당일인 9일 저녁 이뤄질 예정이며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외교수석)은 "경제 협력이 러-중 정상회담의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분야 협력을 포함 17건의 협력문서가 서명될 것"이라고 설명했음.
-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이미 양국 간에 계약이 체결된 '동부 노선'을 이용한 가스 공급 사업 외에 '서부 노선' 이용 가스 공급 사업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부 노선' 사업은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의 알타이

지역에서 중국 서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서부 노선' 가스관을 건설해 연 300억㎥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외무성 "'인권공세' 美와 인권·핵 대화 안해"(11/4,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압박에 반발하며 미국과 인권이나 핵에 관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대변인은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정치도덕적으로 흐려놓고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을 정당화하는 불순한 망발들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음.
- 특히 현 미국 정부가 과거 정권과 달리 인권 문제로 북한을 전복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구한다며 "조선반도 비핵화의 근본기초로 되였던 조미가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데 대한 2005년 9·19공동성명의 공약을 깨버리고 있다"고 비난함.

■ "요덕수용소 폐쇄후 다루스만 초청한 듯"(11/5, 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치범수용소피해자 가족협회 정광일 대표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내 소식통으로부터 함경남도 요덕 15호 수용소의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이 폐쇄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으며, 폐쇄 후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 '북한, 최악의 종교박해국'(11/5, 미국의 소리)

- 로마 가톨릭 교황청 직속기구인 국제가톨릭사목원조기구가 4일 '2014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박해국 6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음.
- 국제가톨릭사목원조기구는 북한 내 종교인에 대한 박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재정권을 신격화하고 있으며, 김 씨 왕조에 대한 절대 충성 외에는 어떠한 종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음.
-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성분체제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종교를 가진 이들을 적대계층으로 분류해 가혹한 처벌과 박해를 가한다고 비판함.

■ 주미 중국대사 "북한 ICC회부 반대…내정 간섭말라"(11/6, 연합뉴스)

-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북한의 내정(domestic affairs)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난함.
- '북한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과 일본 주도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해외에 주재하는 공관장이 직접 나서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례적임.
- 추이 대사는 "미국이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 인민들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ICC이건 다른 곳이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도움이 되거나 건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음.

■ 중국 관영매체, 북한 제작 탈북자 비방 영상 게재(11/6,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6일 인터넷판인 환구망의 메인 페이지에 북한의 대남선전용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탈북자 비방을 위해 선전용으로 제작한 영상 '거짓과 진실'을 올리고 북한 측 주장을 전달함.
- 북한 측이 환구시보에 제공한 9분 34초짜리 이 영상은 '우리민족끼리'가 최근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한 탈북자 신동혁 씨의 아버지와 고향 주민 등을 인터뷰한 것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 등 신 씨가 증언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의 증언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임.
- 또한 환구시보는 이날 기사에서 주중 북한대사관의 문성혁 공보참사관을 인용해 신 씨가 한국의 '탈북자 수용소'에 거주하며 북한 유엔대표부가 7일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 상황 설명회를 열어 "북한에는 수용소가 존재하지 않지만 구류소가 있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반성하고 노동을 통해 사상을 개조한다"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 북한 농아인 대표단 핀란드 방문, 국제개발부 장관 면담(11/8, 미국의 소리)

- 핀란드 국제개발부의 유하 펠토넨 대변인은 7일 농아인 3명 및 조선장애인보호연맹 관계자 3명 등 북한 대표단 6명이 국제개발부 세르파 파테로 장관을 면담했다고 말했음.
- 이번 면담은 핀란드농아인협회의 주선으로 30분 간 이뤄졌으며, 북한농아협회는 핀란드와 교류를 계속 원하고 있다고 밝힘.
- 펠토넨 대변인은 핀란드 고위 관리가 북한의 농아인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핀란드는 북한에 순수한 인도적 지원만 하고 있을 뿐 (장애인 지원 등) 개발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
- 핀란드에 본부를 둔 세계농아인협회(World Federation of the Deaf)는 지난 2012년 북한의 조선장애인보호연맹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단체 웹사이트에 따르면 양측은 양해각서를 통해 북한 농아인들의 민생 개선 등 모든 분야에서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 "카타르 건설현장서 북한 노동자 수천 명 '노예 노동'"(11/8, 연합뉴스)

- 2022년 월드컵 개최지인 카타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의 이주 노동자 수천명이 임금 대부분을 북한 정부에 강탈당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매체는 현지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정부가 지난 3년간 카타르에서 일하는 자국 노동자들의 급여 중 90% 이상을 챙겼다고 전했음.
- 2022년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카타르 루자일 신도시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설현장이 4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 노동자들은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 다른 국적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난 뒤에도 오래 남아 밤까지 일한다고 가디언은 전했음.
- 인권단체인 국제노예노동반대기구(ASI)의 에이던 맥퀘이드 대표는 카타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강탈과 지나친 노동 강도 등을 거론하며 "정부 주도의 강제 노동"이라고 비판했음.
- 카타르 정부에 등록된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2천8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카타르 노동사회부 대변인은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이나 처우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전세계 각국에서 온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억류 미국인 2명 모두 석방…귀국길에(11/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이 억류해온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매튜 토드 밀러(24)씨를 전격 석방했다고 밝힘.
- 두 미국인은 이날 오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에 파견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과 함께 평양을 떠나 미국령 괌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며, 오후 미국을 향해 출발해 이날 밤늦게 워싱턴 주 매코드 공군기지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음.
- 미국은 클래퍼 국장의 특사파견에 대해 억류자 석방이라는 인도주의적 임무에 국한돼있으며 북미관계나 북한 핵문제와 같은 정무적 사안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정부 "미국인 석방 환영…김정욱 선교사도 석방해야"(11/9, 연합뉴스)

- 정부는 9일 새벽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억류 중이던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씨를 석방한 것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남북한 간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정부는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측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우리 김정욱 선교사도 조속히 석방, 송환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간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함.
- 이번 석방과 관련, 외교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필요한 설명을 들어왔다"고 전했으며, 조만간 미국으로부터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방북 등에 따른 사후 설명도 들을 예정이라고 밝힘.

2. 북한 인권

■ 법무부, 제2차 '북한인권 심포지엄' 개최(11/3, 통일신문)

-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북한인권 개선 및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이행 전략'을 주제로 제2차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했음.
-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2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가 반(反)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국제사회에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 차원에서 마련됐음.
-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에 설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UN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등 UN과의 협력 방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민간단체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음.

■ 한국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내정간섭 아냐"(11/7, 미국의 소리)

-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내정간섭이라고 밝힌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발언이라고 반박했음.
-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문제로, 이미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공론화된 사안이 됐기 때문에 내정간섭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음.
- 추이 대사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해외주재 공관장으로서 직접 이 문제를 공개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로,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 초안이 예년의 결의안보다 내용면에서 한층 강한 톤이라는 점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음.

■ 유엔, '북한인권 ICC 회부' 논의 본궤도 진입(11/7, 연합뉴스)

-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 EU를 대표한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가토 일등참사관은 "유엔 총회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북한의 인권 침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올해 제출된 결의안에는 유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제출해 안보리가 COI의 권고대로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북한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음.
-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다루스만 보고관과 람브리니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결의안 채택이 강행된다면 예상 못 한 결과가 나올 것이며, 유럽연합과 일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음.

■ 통일부 "北 인권 개선돼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11/7, 연합뉴스)

- 임형철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미국에 동조하면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했음.
- 임 대변인은 "유엔과 EU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음.

3. 탈북자

■ 특이동향 없음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북한, 일본인 납치 실행범 조사 방침 밝혀'(11/6, 미국의 소리)

-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맡고 있는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주 평양에서 열린 북-일 협의에서 일본인 납치 실행범들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음.
- 일본 언론들은 북-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이 국제 수배자로 지목한 5명 가량이 조사대상에 오를 것이라 전했으며,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납치를 실행한 신광수와 김세호가 포함돼 있음.
-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납치 실행범들을 상대로 어느 수준까지 조사를 진행할지 알 수 없는 만큼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통보를 연기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음.

■ "납북 메구미, 1994년 北정신병원서 숨져 야산에 묻혀"(11/7, 연합뉴스)

- 일본인 납북자문제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가 1994년 평양의 한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제기되었음.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7일 전화통화에서 일본 총리실 납치문제대책본부와 메구미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메구미가 입원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했던 탈북자 2명의 증언을 통해 메구미의 사망 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음.
- 최 대표에 따르면 해당 탈북자들은 "메구미가 평양시 49호 병원(정신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라며 "1994년 4월 병원에서 사망해 그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라고 증언했음.
- 최 대표는 일본 측 조사관 3명과 함께 지난 9월 제3국에서 해당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신원과 현재 위치를 아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음.

-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회견에서 일본 측 납치문제대책본부 등이 메구미 사망에 관한 공동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음.
- 또한 이번 메구미 사망 정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잘라말하고 "지금까지도 생존 정보라든지 여러 정보가 나돌았다. 정부는 현재 납치 피해자 전원의 생존을 전제로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증언자 2명, 현재 北 탈출… 메구미 부모와 면담 추진(11/7, 동아일보)

- 일본 정부의 납치문제대책본부와 함께 메구미 사망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6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요코타 메구미의 타살과 시신 유기를 증언한 관계자들과 메구미 부모와의 직접 면담을 추진할 것이며, 이런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음.
- 증언자 2명은 메구미가 1994년 사망할 당시 정신병원인 평양 49호 예방원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로, 증언자들은 현재 탈북 후 신변 안전이 보장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일본 정부와 최 대표는 제3국에서 비밀리에 증언자들을 면담 조사했다. 조사에는 이틀이 걸렸고 증언자들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자필로 기록을 남겼음.
- 증언자들은 △사망한 메구미의 시신과 유기 장면을 목격했고 △메구미에게 투여한 약품의 종류와 투여량, 위험성까지 자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메구미가 갇혀 있었던 평양 49호 병원의 종사자, 병동 배치까지 구체적으로 증언하여, 이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경기도, 6일 중국서 대북지원 국제회의(11/3, 연합뉴스)

- 경기도는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2014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연다고 3일 밝힘.
-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 상황과 대북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북한 상주기구와 비상주기구간 조정·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부서 확대 추진(11/4,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정세분석국의 정보관리과를 폐지하고 교류협력국에 인도개발협력과를, 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 인도개발협력과는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지원 사업처럼 국제기구를 통한 대규모 대북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진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며, 교류협력국 산하의 기존 인도지원과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소규모 대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됨.

■ 미 구호단체, 북한 에볼라 조치로 방북 연기(11/4, 미국의 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이 에볼라 대응과 관련해 모든 입국 외국인들을 21일 동안 격리하기로 하면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방북하려던 계획을 연기했음.
- 하이디 린튼 대표는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21일 동안 격리돼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방북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계획을 연기했으나, 취소된 것은 아니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철회되는 대로 방북 계획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음.

■ 187만 달러 규모 새 대북 8사업 추진(11/5, 미국의 소리)

-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아이드'는 4일 내년 초부터 강원도 통천군과 법동군에서 새로운 영양 개선과 식량안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최근 유럽연합에 예산 150만 유로, 미화 187만 달러를 요청했다고 밝힘.

- 이파 블랙 북한 담당관은 두 지역 주민들에게 수확량 증대에 효과적인 보전농법을 전수하고 식품가공기계를 제공하며, 협동농장에 관개시설을 설치해 줄 예정이라고 설명함.
- 또한 이 지역의 식품가공공장 재건을 돕고, 각급 기관과 가정들에 화장실도 지어줄 예정이며, 이번 사업으로 현지 어린이와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함.

■ 프랑스 NGO, 새 북한 노인 복지 사업 진행(11/6, 미국의 소리)

- 프랑스 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북한 노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 사업을 시작했음.
- 이 단체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폴란드 정부가 지원한 1만 2천 유로, 미화 1만 5천 달러로 지난 6월부터 6개월 동안 북한 노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 장수 연구소(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Gerontology)에 의료기구를 지원하고, 보건 관계자들과 의대생들에게 노인학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수칙 자료도 제작해 노인들에게 배포하고 있음.
- 단체는 북한 '조선연로자보호연맹' (Korean Federation for the Care of the Aged, KFCA)과 협력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단체 관계자들과 북한 장수연구소 직원과 환자, 북한 내 320만 여명의 노인들이 직,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유럽연합의 지원 67만 유로, 미화 91만 달러로 조선연로자보호연맹 소속 180여 명과 은퇴자 시설에 거주하는 7천 2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프랑스 국제개발처의 지원으로 가족이 없는 7천 5백 여명의 노인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미 NGO, 한 달간 북서 우물파기 지원(11/6,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민간단체 '웰스프링'이 최근 한 달 동안 북한에서 수맥을 찾는 시추기 설치 등의 지원활동을 펼쳤으며, 미화 12만5천 달러 상당의 수맥을 찾는 시추기계와 트럭도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힘.

■ 영NGO '쉘터박스' 올해 대북지원 종료(11/7,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의 민간단체 '쉘터박스'(ShelterBox)는 지난 8월 올해 30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힘.
- 이 단체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영국 정부를 비롯해 유럽 국가와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모금한 30만 달러를 들여 북한에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텐트, 즉 천막으로 된 임시거처와 담요, 취사도구 등을 지원했음.
- 이 단체의 지원 담당자는 올해 8월 경 영국의 북한 대사관 측에 추가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북한 측은 추가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올해 사업 완료 후 현재로서는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하지만 쉘터박스 측은 북한에서 앞으로 지원 요청이 온다면 예산과 지원 필요 여부를 점검한 뒤 언제든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임.

■ 프랑스 NGO, 북한서 사료 증산 사업 추진(11/7, 미국의 소리)

- 프랑스 민간단체 '프리미어 어전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사업 담당관은 6일 내년부터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사료 생산 증대 사업을 새로 시작할 계획이며, 올해 말로 끝나는 염소우유 지원 사업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음을 밝힘.
- 베노리엘 담당관은 사료 생산 증대를 위해 황해남도 농업대학 축산학과 교수와 학생, 시범농장 관계자 400여 명에게 사료 생산 증산 방안을 기술지도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내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되며 관련 예산 38만 유로, 미화 48만 달러를 유럽연합에 요청했다고 전함.

또한 황해남도 식량안보 사업 연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 140만 유로, 미화 175만 달러를 유럽연합에 요청했다고 밝힘.

8. 북한동향

■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에 '北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南 당국이 미국의 反北 인권모략 소동에 계속 가담해 나선다면 남북관계는 언제 가도 파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11.2,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모략의 불순한 모략은 가리울 수 없다)

■ 北인권문제와 對北 전단살포 등 거론 '우리(北)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추호도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비난 및 '단호한 징벌' 위협(11.3,중앙통신·노동신문/대결과 전쟁을 몰아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

■ 對北전단 살포 등 北 인권문제 관련 '반공화국 핵소동의 실패로 파산의 위기에 처한 대결전략에 입김을 불어넣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 압살야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범죄적 흉계의 발로'라며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 남조선 보수패당의 책동을 천백배로 받아낼 것'이라고 위협(11.3,평양방송/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체제대결야망의 발로)

■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11.4)을 통해 '北 인권'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며 '우리(北)를 전복하려는 미국과는 인권대화는 물론 핵 대화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11.4,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